

#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육아정책과 공간정책의 융합이 필요하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명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초초저출산 사회’라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지경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출산율이란 수치를 단순한 양적 지표로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 사회가 일과 육아를 양립하며 생활하기 어렵다는 정도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로 보고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국가가 국민에게 자녀를 몇 명 낳으라고 하기 보다는 국민이 일과 육아를 양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참여정부 때부터 저출산 문제를 국정 어젠다로 선정하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발족(2004년)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2005년)하였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기 시작하여 5년 단위로 재수립해오고 있다. 제1차 계획은 ‘육아’에 초점을 두어 보육정책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고, 제2차 계획은 ‘출산과 일-가정 양립’에, 제3차 계획은 ‘결혼할 수 있는 환경’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개인의 선택 존중, 삶의 질의 강조’로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판을 발표하였고,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 중에 있다.

앞으로 초초저출산 사회의 저출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까? 사회 변화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정책들로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육아정책도 새로운 도전과 확장,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육아정책은 ‘서비스+현금+시간지원 정책’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등 시설과 가정 중심의 정책이 주였지만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앞으로의 정책은 ‘공간 지원 정책’을 결합한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공간에서 태어나 공간에서 성장·발달한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이들은 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사회의 복지·문화·

체육·녹지 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간은 인간의 삶의 질의 기본 요소로서, 아이와 부모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육아정책은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발달하고 육아하는 당사자도 행복하게 육아하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였다고, 모든 육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육아하였다고 추억할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결합 육아정책을, 육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요 과제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제1차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의 기초강연 자료(공간정책과 결합한 육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안, 백선희)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